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수혜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 양 호* 홍 미 영**

초 록

본 연구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수립한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지역여성들의 의식과 태도 및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조사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조사 결과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여성정책 수립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젠더설계를 거친 설문지 조사를 사용하였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부문에서는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지원체계의 인프라 구축, 현실적이고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실시, 취업알선을 위한 헤드헌팅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성정책개선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의식 제고, 여성정책 사업의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 유인조성, 관련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정책, 수혜자 인식, 젠더설계, 젠더요구, 양성평등사회

*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I. 서 론

최근 여성부가 2002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제1차 여성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그 시기가 종료된 곳은 제2차 여성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그 지역여성들의 복지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핵심전략과 과제를 명확하게 선정하지 않으면 상징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역현실은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여성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거나 이를 위한 전담인원 배치가 필요하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확보를 근래에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지역여성들의 정확한 정책인식실태를 파악·반영하는 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여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정책이 그 지역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수단이 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변화하는 의식과 삶의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이 그 지역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수단이 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변화하는 의식과 삶의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 연구는 부산지역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과 의식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여성

들의 인식과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설정하고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¹⁾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탐색적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가 병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는 조사설계를 위한 관련선행연구를 비롯하여 통계청 및 해당 시청의 여성관련 통계, 2003년도 여성정책업무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여성부의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정책 추진 계획 및 상황에 대한 정책자료가 검토되었다. 조사연구는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인식실태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정책의 인지도 및 여성정책 방향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정책 요구도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여성정책과 수혜자 인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여성패러다임의 국제적 동향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여성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발전과정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 WID)’이라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1) 여성정책인식조사에 관한 본 연구의 특징 및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여성권익부문에서 성차별의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성차별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와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기존 조사가 저소득층 여성을 복지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면, 본 조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반여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이 요보호 여성이나 특정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여성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최근 정책적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부산)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평가, 요구도 및 당면 정책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여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시행되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뜻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지역여성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여성정책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이다.

지 여성들은 경제활동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 영양, 가족계획, 소득창출과 같은 여성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주력하게 되었고,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의식개혁 및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WID 접근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보다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이 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접근법이었기에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전통적인 성별 분업 구조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재편성되거나 도리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1985년 나이로비 UN 3차 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그 간의 여성발전 사업을 평가하고, WID 접근이 여성의 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지위와 역할에서 빚어지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 GAD)’이라는 관점의 분석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여 GAD접근법을 소개하였다. GAD 접근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에 대하여 발전과정에서 여성을 소외시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가 형성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거나, 남성주도의 권력분배가 이루어지고, 남성에 의한 통제가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GAD 접근방법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통해 여성의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에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성역할을 수용하면서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하고자 하는 WID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권력화(empowerment)와 불평등한 젠더(gender)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GAD 접근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²⁾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젠더와 성

2) 성 주류화는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서 ‘성에 대한

주류화를 세계여성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³⁾ 비단, 성 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성차별 실태와 경험이나 성별분리 통계의 마련, 평등과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만들기, 성인지력 향상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법·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와 같은 도구들이 성 주류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여성정책의 특징과 지역사회의 현실

한국의 과거 여성정책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근간을 여성복지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접근방법과 대상이 달라졌다. 즉 여성복지를 바라보던 관점이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전환되면서 정책의 대상은 ‘요보호여성’에서 ‘일반여성’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의 수혜자가 단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여성으로 확대되며, 기본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둘째, 여성정책의 대상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모든 정책영역에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gender-main streaming)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공식적 용어가 되면서 일련의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성 관점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3) 성주류화의 주요내용은 첫째, 모든 정책분야 및 정책수행기관의 성 관점 통합을 의미하는 성 주류화, 둘째,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성 주류화, 셋째, 기존의 남성중심적 조직인 정부 및 주류 영역의 성인지적 재편을 의미하는 성 주류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UN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은 기존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같은 전략과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한다. 적극적 우대조치와 반차별 법안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여성이 경험한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차별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성을 특별하게 다루지만, 주류화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남성들 내의 차이와 여성들 내의 차이를 고려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주류화는 남성부양자/ 여성피부양자라는 젠더 위계의 전제로부터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김경희, 2002 : 23).

(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키고,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성(gender)을 고려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형성 및 결정의 단계에서 성별 관점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식 개혁 운동이자 새로운 정책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성정책의 방향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성평등을 정책지향의 기조로 삼게 되었다.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그 대상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정책의 환경변화는 더 이상 여성정책이 여성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남성과 함께 경쟁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며,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성정책의 환경변화를 수용해 나가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사회 여성의 취약한 현실은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여성인구와 생활실태를 다른 서울 및 다른 6대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통계청 DB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이는 본 조사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일부 제공한다. 첫째, 전국 및 7대 도시 인구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과 광주이며,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부산은 7대 도시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 기준 혼인 대비 이혼율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부산이 두 번째로 57.6%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7대도시 가운데 2위를 차지한다. 셋째, 2002년도에 부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72.2%에 비한다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6대 광역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울산광역시의 44.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산 여성의 실업률 역시 울산광역시와 동일한 비율(2.3%)로 가장 낮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어,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타 시도에 비해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산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⁴⁾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여성의원의 의회진출이다. 부산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그나마 높은 비율(10%)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원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외부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이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전체의 공무원 12,889명 중 여성은 27.3%를 차지하여 3,513명이었다. 이는 인천의 27.5%와 울산의 29.2%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51명으로 부산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1,104명에 비하여 4.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고, 광역 시도 차원에서도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다. 특이한 사항은 울산이나 부산처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4) 더욱이, 부산여성의 실업특성은 15-18세의 실업률이 8.8%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29세 연령층으로 5.4%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및 40대의 실업률이 각각 2.8%,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고용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는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나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경험하게 되어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됨으로,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율이 낮은 경우는 6급 이하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성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현상은 지역여성정책의 취약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그간 부산의 지역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지원, 교양교육 등에 치우치고 있으며 요보호 중심의 여성복지 증진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관련 정책을 다루는 여성복지과 내지 여성정책과의 업무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교육, 지역소재의 여성회관 지원 등에 제한되고 있었던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실제로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도 여성복지과(여성정책과)에서 여성복지가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전체 여성을 대상집단으로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다. 더욱이 일반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의식함양 등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의미가 매우 소극적이며 고용참여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부분, 또한 남녀차별 지향정책은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남녀평등 지향정책,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보다는 요보호여성 중심, 봉사활동지원,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진부한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바자회나 문화센터 운영 등은 최근 대두된 국제적 여성패러다임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여성정책에 대한 수혜자 인식 : 실제적 요구(PGN)와 전략적 요구(SGN)

최근 여성정책의 초점은 “정책에서 소외된 여성”이 아닌 “실질적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한 전략이 ‘성주류화 전략’이다. ‘성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향력 관계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수립하는 정책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즉, 현실세계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 전환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젠더(gender:성)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Moser(1993)는 젠더요구는 '전략적 젠더요구(Strategic Gender Needs)'와 '실제적 젠더요구(Practical Gender Needs)'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실제적 젠더요구는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역할을 나타내는 요구이다. 실제적 젠더 요구는 성별 노동분업이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탈피하려 하지만 도전하지는 않으며 특정 맥락에서 나타나는 인지된 필요성을 매개하는 대응이다. 따라서 실질적 젠더요구는 여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생활, 주거, 교통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이와는 달리, 전략적 젠더요구는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로 인해 나타내는 요구로서 특정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성별 노동분업, 권력 및 통제와 관계가 있고, 법적 권리, 가정폭력, 동일 임금, 자기 신체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 등과 같은 이슈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구조와 관계의 본질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도전한다(Moser, 1993; 장미경 외, 2000 : 64-69).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여성정책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전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실제적 젠더요구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이며, 남성과의 실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젠더설계자들은 실제적 젠더요구를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Moser(1993)는 바로 이러한 것이 젠더 설계시 발생하는 고질적 오류이며, 실제적 젠더요구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 요구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전략적 젠더요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할 뿐이라고 한다(Moser, 1993; 장미경 외, 2000 : 79-88). 즉 실제적 젠더요구는 전략적 젠더요구의 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이며, 연구의 문항설계 과정에서 전략적 젠더요구에 따른 가정생활, 사회활동참여, 경제활동, 기존정책인식, 양성평등의식을 포함하였다.

4. 기존연구의 검토

일반적인 정책조사에 대한 이해의 혼란만큼 인식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의 인식조사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박경란 외(1997 : 175-213)는 김해시의 성인여성과 여성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여성단체 및 기관의 실태조사와 여성의 복지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항목은 남녀평등의식, 경제적 취업동기, 경제외적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정치의식의 5가지로 나누었으며, 308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정치의식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과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부산광역시(1999 : 1-167)는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전략에 의거하여 경제, 보건복지, 여성권익, 사회문화, 여성사회교육, 여성행정의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인여성의 정책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들이 직업·기술교육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정책의 내용도 “직업훈련 및 취업증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1999 : 1-145)은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 1,487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의식과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952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한 결과, 가정과 보건, 환경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식이 낮아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부문별로 제시한다. 이숙진(2000 : 1-132)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사용된 기준은 가족생활, 경제활동, 사회참여, 성평등 의식, 여성정책과 여성사회교육, 여성정책요구도의 6가지 였으며, 1,010명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의식이 낮았고, 여성복지욕구가 매우 높았다. 박충선(2001 : 1-28)은 대구지역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복지정책의 욕구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다. 사용된 기준은 여성관련법(여성호주제도, 여성상속권, 이혼시 재산분할권)과 여성관련제도(모성보호비용의 국가부담, 성차별 고발센터), 사회참여활동, 여성관련 복지서비스의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직접면접으로 198개의 유효표본을 얻어 분석한 결과, 여성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특정분야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2003 : 85-110)은 전남 목포시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면접과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의 177가구의 표본분석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욕구는 기본적 생계유지 수준이었으며, 노인복지정책 수립에서 지역사회의 경로당이 단순한 오락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상 선행연구의 다수는 정책적 조사의 설계단계에서 1회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내용 분석시 일반 실태조사와 혼동되어 구체적 욕구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척도문제, 조사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등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

III. 연구설계

1. 피라미드 모형과 문항설계

일반적으로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⁵⁾ 정책인식조사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크게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상태가 요구되는 조건을 평가하거나 추측하는 행위”라는 견해, “공식적 조사과정은 요구도를 파악하는 절차, 파악된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절차,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역차원에서 교육에 연결시키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견해, 그리고 “단순히 지역사

5) 먼저 요구도의 개념 대해 Scriven & Roth(1978)는 “A가 X를 필요하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X가 없을 때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Altschuld 자신은 “현재 상태(a present state, what is)와 바람직한 상태(a desirable state, what should be)에 대한 간격(gap or discrepancy)”을 의미하고 추론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Altschuld, 1995 : 36). 결국 요구는 현실과 당위적 미래의 차이에서 생기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때때로 원함(wants), 요구(demand) 등과 혼동되지만 문제(problem)나 관심(concern)에 가깝다고 한다(Altschuld, 1995 : 35-45).

회에 살고 있는 주민의 요구와 경향을 결정하는 조사(research) 및 계획 행위(planning activity)”라는 견해, “요구도조사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기관조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할당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조사)과정”이라는 주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Altschuld, 1995 : 38; 이숙진, 2000 : 16; 서인혜 외, 2001 : 68). 이상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먼저 정책인식과 요구도 조사에 관한 이론 및 문헌검토와 전략적 젠더요구에 근거한 젠더 설계의 개념적 틀을 잡고, 다시 ‘피라미드식’ 조사과정에 따른 예비설계를 한다. 이어 부산지역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생활실태 및 정책요구도를 사회참여분야,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의 인식분야, 양성평등의식의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실태 및 정책현황과 요구도, 문제점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논리로 향후 정책수립의 방향도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이는 정책인식 및 요구도조사의 목적과 결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책인식 및 요구도 조사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렴성(convergence)’이다(Harlow & Turner, 1993; Witkin & Altschuld, 1995). 여기에서는 인식 및 요구도조사 설계시 최초 단계부터 Harlow & Turner의 ‘피라미드 조사모형’과 Witkin & Altschuld의 ‘3단계 조사모형’을 참고했다. Witkin & Altschuld(1995)는 과거 조사의 일회성과 무계획성을 극복하기 위해 ‘3단계 방식(pre-assessment, assessment, post-assessment)’으로 구분했다. 특히, Harlow & Turner(1993 : 190-199)는 조사계획에 있어서 “조사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시기에 함께 투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수렴성은 그들의 ‘피라미드 조사모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모형에서 그는 4단계의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1단계에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차적·행정 자료로부터, 2-3단계에서는 그 다음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조사기법으로, 그리고 마지막 4 단계에는 1-3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

대로 지역 전체적인 요구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작위표본추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Harlow & Turner, 1993 : 194-196). 한편, 문항설계시 선행연구의 검토시 분석된 설문지를 참조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즉, Moser(1993)의 젠더설계 및 국내연구(박경란 외, 1997; 충남여성개발원, 1998; 부산광역시, 1999, 이숙진, 2000; 박충선, 2001; 김양희 외, 1999)을 분석하여, 설문지 최종설계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경제활동,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역여성정책, 양성평등의식 등 4개 영역에서 53개 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질문지는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었으며, 50명의 예비조사(pilot test)과정을 거쳤다.

<표 1> 설문지 구성

차원(문항수)	조 사 내 용 및 항 목
여성사회참여(5)	참여사회활동, 여성단체역할, 여성단체평가, 여성단체활동을 위한 조건, 여성단체활동 참가의사
경제활동(17)	경제활동문항 : 소득활동여부, 소득활동형태, 직종형태, 고용형태, 성희롱예방교육 유무, 근로여성복지프로그램, 소득활동시 애로사항, 미소득사유, 실업자등록, 소득활동의사, 희망직종, 희망근무형태, 직업훈련에 관한 의견, 직업훈련 교육의사, 희망 직업교육, 여성취업대책
여성정책(16)	여성정책인지도, 여성관련사업인지도(5개항목), 중점 여성정책 요구, 여성의 복지수준, 여성복지시설 내용, 지자체 요구과제, 법제도적 관련 사항인지(6개 항목)
양성평등의식(6)	양성평등의식 측정을 위한 6개 항목(한국여성개발원)
개인 특성(9)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형태, 가족수, 평균 가족소득, 경제활동상태, 가구 성별특성

2.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의 인구현황을 <표 2>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분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의 인구구조는 남녀 모두를 합쳐 40-44세 연령대가 359,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9세 이하의 보육연령의 아동은 415,476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5,012명에 달하였다. 여성인구는 40-44세가 가장 많았으며, 20-24세의 여성인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인구는 전체 여성인구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1.6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배 이상이나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분포의 특성은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는 9세 이하 아동은 보육정책의 수요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정책적 요구가 무엇이며, 복지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2> 부산광역시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 (단위 : 명(%))

구 분	2003년			
	전 체	남 성	여 성	성 비
총인구	3,730,125	1,862,520	1,867,605	99.7
0-4세	180,869	95,214	85,655(4.6)	111.1
5-9세	234,607	126,371	108,236(5.8)	116.7
10-14세	245,351	131,554	113,797(6.1)	115.6
15-19세	271,033	140,839	130,194(7.0)	108.1
20-24세	356,858	184,859	171,994(9.2)	107.5
25-29세	309,682	157,901	151,781(8.1)	104.0
30-34세	318,574	160,771	157,803(8.4)	101.9
35-39세	298,793	148,288	150,505(8.1)	98.5
40-44세	359,391	175,037	184,354(9.9)	94.9
45-49세	314,987	155,821	159,166(8.5)	97.9

구 분	2003년			
	전 체	남 성	여 성	성 비
50-54세	240,963	120,262	120,701(6.5)	99.6
55-59세	181,272	90,439	90,833(4.9)	99.6
60-64세	163,103	78,993	84,110(4.5)	93.9
65-69세	108,856	48,198	60,658(3.2)	79.5
70-74세	70,735	26,265	44,110(2.4)	59.5
75세-79세	42,538	13,332	29,196(1.6)	45.7
80세이상	32,883	8,376	24,507(1.3)	34.8

* 자료 :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내부자료(2004).

3.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자료수집을 위해 20세 이상 지역성인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방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은 지역별, 연령별 할당 추출에 따른 무작위 추출을 했으며, 조사는 전문조사원의 직접 면접에 의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시는 전문여론조사분석기관인 'J 리서치'에 의뢰하였다. 표본의 특성에서 우선 연령은 60대가 5.4%(54명)로 가장 적었고,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432명(4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27.8%)보다 기혼(65.7%)이 많았으며,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중심의 형태가 640가구(64.0%)로 가장 많았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가구가 322가구(32.2%)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전체의 월평균 소득 중 응답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533명(53.3%)이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150만원이하가 207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미만은 187명(18.7%)이었으며, 그 중에서 50만원이하의 64명(6.4%)이었다. 특히 응답자를 경제활동 상태에

경제와 비경제 활동인구로 구분했는데, 경제활동 여성은 536명(53.6%)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464명(46.4%)을 차지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로서 전문직 종사여성은 72명(7.2%), 일반취업여성은 411명(41.1%)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기혼은 362명(36.2%), 미혼은 174명(17.4%)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혼은 360명(36.0%), 미혼은 104명(10.4%)으로 나타남으로써 혼인을 하여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원 중 세대주의 성별은 남성이 847명(84.7%)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153명(15.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사하구의 응답자가 많았으며, 중구, 강서구, 기장군 등 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은 응답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IV. 실증적 분석결과

1.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평가

응답한 여성들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465명(46.5%)이었으며, '특별히 참여하는 곳이 없음'에 응답한 여성은 535명(53.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응답한 여성의 구체적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문화, 취미, 학습활동'에 가장 많은 32.9%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동 부녀회 활동'에 21.5%, '자원봉사활동'에 20.2% 등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수단이 적극적인 방법(여성단체, 정치, 기타 단체활동)이 아닌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여성 사회참여 활동내용

구 분	빈 도	%
1. 자원봉사활동	94	20.2
2. 육성회나 학부모회 등 학교활동	55	11.8
3. 여성단체활동	29	6.2
4. 아파트나 동에서의 부녀회 활동	100	21.5
5. 문화, 취미, 학습활동	153	32.9
6. 정치활동	3	0.7
7. 직능단체활동	8	1.8
8. 기타	23	4.9
합계	465	100.0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는 <표 4>와 같다.⁶⁾ 대부분의 부산여성들은 ‘잘 모르겠다’가 30.8%로 여성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한 의견 가운데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가 16.9%, ‘지역사회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13.5%, ‘여성의 대표성을 가진 대변자이다’라는 의견이 9.1%로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일부 여성들끼리의 모임이다’가 17.0%,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가 8.0%로 여성단체 활동에 무관심한 반응들과 합하면 55.8%에 달하고 있어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활동과 역할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여성단체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여성들의 의식변화’를 29.3%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은 ‘능력있는 지도자와 실무자’(19.7%), ‘회원의 증가와

6)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수단인 지역의 여성단체활동 상황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현재 여성단체에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2%가 여성단체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들 응답자 가운데는 ‘여성단체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혹은 ‘여성단체 활동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도 있었다. 여성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이 27.1%로 가장 높았고, ‘여성들의 의식교육활동’이 19.8%, ‘자원봉사활동’ 15.1%로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참여확대'(16.2%), '재정확보'(12.1%), '홍보'(11.7%), '프로그램 개발'(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의 조건

구 분	빈 도	%	구 분	빈 도	%
무 응 답	14	1.4	무 응 답	19	1.9
일부여성들의모임	170	17.0	재 정 확 보	121	12.1
여성지위향상노력	169	16.9	지도자와 실무자	197	19.7
여성의대변자	91	9.1	일반여성의식변화	293	29.3
여성현실반영노력	135	13.5	프 로 그 램 개 발	86	8.6
여성정책사업실행	31	3.1	홍 보	117	11.7
별다른활동안함	80	8.0	회원증가참여확대	162	16.2
잘 모 림	308	30.8	기 타	5	0.5
기 타	2	0.2	합 계	1000	100.0
계	1000	100.0			

2. 여성의 경제활동

1) 경제활동여성의 인식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는 경제활동 여성이 53.6%, 비경제활동여성은 46.4%로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⁷⁾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상용직이 31.9%로 가장 높았고, 1인 이상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도 3.4%였다. 시간제와 관련하여 '1일 7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모두 62명(11.6%)이었으며, '1일 전일제와 같은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는 29명(5.4%)이었다. 시간제 고용계약은 고용형태가 다를 뿐 전일제 상용직과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⁸⁾ 일

7) 이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55.4%이며, 자영업은 31.5%,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그리고,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판매서비스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20.9%, 전문직 12.6%, 생산직 10.3%, 행정관리직 2.27%, 기타 8.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는 여성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항은 ‘근무시간이 길다’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적다’가 14.9%, ‘장래성이나 전망이 없다’가 10.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느낄 만큼 소득수준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며, 경력개발에 유용하다는 자부심을 갖지도 못함을 뜻한다. 이는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 다양한 일자리와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함축한다.

<표 5>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고용형태와 애로사항

구 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
경제활동안함	3	0.6	근무시간 길다	195	36.4
미취업실업비등록	6	1.1	거리가 멀다	58	10.8
고용주	18	3.4	근무환경 좋지 않음	29	5.4
자영업	148	27.6	수입이 적다	80	14.9
무급가족종사자	3	0.6	집안 일 함께 좋음	4	0.7
정규직	171	31.9	자녀양육 힘들	18	3.4
비정규직시간제	62	11.6	여자라고 맞지 않음	12	2.2
비정규직전일제	29	5.4	적성 맞지 않음	4	0.7
비정규직일용직	15	2.8	장래성 전망 없음	4	0.7
비정규직(용역,파견직)	9	1.7	힘들지 않다	45	8.4
가내부업	6	1.1	기타	11	2.1
기타	16	3.0	무응답	76	14.2
합계	486	90.7	합계	536	100.0
시스템 결측값	50	9.3			
합계	536	100.0			

- 8) 그리고,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여부는 응답자의 65.1%가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하는 여성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항들은 ‘근무시간이 길다’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적다’가 14.9%, ‘장래성이나 전망이 없다’가 10.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느낄 만큼 소득수준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며, 경력개발에 유용하다는 자부심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양한 일자리와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2) 비경제활동여성의 인식

전체 응답자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에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가 2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이 때문에’가 16.8%였다.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126명의 여성 중 100명은 기혼이었다. 기혼여성으로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우 대개는 전문적인 일이나 커리어가 요구되는 일을 선호하는데, 실제 비경제활동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커리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시간제 파트타임이나 저임금 판매직 같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특별히 본인이 가정경제를 책임질 만큼의 절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단순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한편, 비경제활동 여성을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면, 비경제활동 기혼 여성의 경우 ‘아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21.3%인데 비해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은 27.7%인 미루어 보아 보육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일자리 부족이나 자녀양육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464명 중 실업자로 등록한 여성은 12명으로 2.6%이었다. 이에 비해 여건이 된다면 소득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55.6%로 나타나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게 되면 실제 실업률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 전체 실업률이 현실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과반수가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감안한다면 여성실업과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 6> 혼인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

구 분	전 체		χ^2 (***p<.001)
	명	%	
1. 아이 때문에	78	16.8	27.80***
2. 필요를 못 느껴서	75	16.1	
3.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	126	27.1	
4. 건강이 좋지 않아서	71	15.3	
5. 가족의 반대 때문에	19	4.0	
6. 기타	70	15.0	
7. 무응답	25	5.3	
계	464	100.0	

한편, <표 7>을 통해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요구도를 살펴 보면 이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기혼여성의 경우 전문직(17.2%)이나 판매 서비스직(16.1%)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미혼여성의 경우는 46.1%가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모두 시간제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기혼여성의 경우는 50.0%이었고, 미혼여성의 경우 59.6%이었다. 최근에 기혼과 미혼 여성들이 모두 시간제 근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상용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직업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같은 조사결과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사나 자녀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여성들에게 더 많이 편중되어 있어 가사와 직장의 일을 병행하는데 곤란을 느끼므로 종일 근무보다는 오히려 탄력적인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혼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표본 중 20대의 여대생들이 상당 비율 포함되어 있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시간제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시간제 근무와 같은 유연한 고용형태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내재되어 있으며,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한가지 대안이 된다.

<표 7>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요구도

구 분		기 혼		미 혼		χ^2 (***p<.001)
		빈도	%	빈도	%	
희망 직종	무응답	148	41.1	20	19.2	36.23***
	생산직	19	5.2	0	0	
	사무직	38	10.5	14	13.4	
	판매서비스직	58	16.1	15	14.4	
	행정관리직	11	3.0	6	5.7	
	전문직	62	17.2	48	46.1	
	기타	24	6.6	1	0.9	
합계		360	100.0	104	100.0	
근무 형태	무응답	150	41.6	21	20.1	23.64***
	종일근무	20	5.5	18	17.3	
	시간근무	181	50.2	62	59.6	
	기타	9	2.5	3	2.8	
합계		360	100.0	104	100.0	
직업 훈련 의견	무응답	148	41.1	20	19.2	29.45***
	훈련받고싶지않음	15	4.1	5	4.8	
	시간경제여유없음	56	15.5	10	9.6	
	받고싶은훈련없음	34	9.4	11	10.5	
	단기훈련받고싶음	68	18.8	29	27.8	
	전문훈련받고싶음	36	10.0	26	25.0	
	기타	3	0.8	3	2.8	
합계		360	100.0	104	100.0	

3)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한 인식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도 전체는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60.4%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2.1%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가장 강한 요구도를 표출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히려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56.8%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9.0%, 전문대졸 이상이 55.7%로 직업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저학력 여성일수록 삶에 대한 의욕이 약화되어 있거나 일용직, 영세자영업 등을 하고 있어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경제활동여성 보다 비경제활동 여성이(52.8%), 무자녀보다 자녀가 있는 여성(62.2%)이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에 변화를 원하거나 현재의 직업을 위해 또는 더 많은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여유, 새로운 직업이나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계속 연계하고 싶은 바램에서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가능한 경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희망직업으로는 ‘컴퓨터 관련 직업’이 11.1%, ‘조리사 미용사 등 자격증 취득’으로 9.5%로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의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표 8>과 같이 자치단체가 여성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자리를 늘린다’(19.8%), ‘취업정보와 알선의 기능 수행’(18.8%), ‘여성들을 위한 직종개발’(17.7%), ‘보육시설을 늘린다’(14.6%), ‘직업교육을 늘린다’(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성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구 분	명	%a	%b
1. 일자리를 늘린다	396	19.8	39.6
2. 보육시설을 늘린다	292	14.6	29.2
3. 직업교육을 늘린다	228	11.4	22.8
4. 취업정보와 알선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	376	18.8	37.6
5. 여성을 위한 직종을 개발한다	353	17.7	35.3
6. 가게 등 창업하려는 여성을 지원한다	213	10.7	21.3
7. 무응답	142	7.1	14.2
합 계	2091	100.0	20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인지도

1) 주요 여성정책의 인지도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종합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등 법률과 제도적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지역여성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과 법에 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여성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60-70%에 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80-90%에 이르고 있어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었다. 또한 지역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인 보건복지여성국과 그 산하의 여성정책과에 대한 인지정도는 8.8%로 매우 낮아 대부분 여성정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성차별신고센터’에 관하여는 ‘대강 알고 있다’는 항목에 20.5%가, ‘잘 알고 있다’에 0.2%가 응답하여 전체 20.7%의 다소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경우가 거의 50~70%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나 제도보다 더욱 낮은 인지도를 보여준다.

<표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에 관한 인식 (단위: %)

항 목	전혀 모른 다	들어봤으나 내용은모른 다	대강 알고있 다	잘알 고 있다	전체
1. 여성발전기본법	67.2	25.5	4.3	0.7	100.0
2.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38.3	39.2	18.6	1.5	100.0
3. 가정폭력방지법	18.2	41.2	33.5	4.5	100.0
4. 남녀고용평등법	24.7	40.3	28.0	3.3	100.0
5. 여성발전종합계획	63.2	27.1	5.8	0.5	100.0
6.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59.7	28.6	7.4	1.4	100.0

항 목	전혀 모른 다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	대강 알고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1. 여성주간 (7.1-7.7)	53.0	31.2	11.9	0.8	100.0
2. 성차별신고센터	34.7	39.6	20.5	0.22	100.0
3. 평등부부상 시상	59.3	24.3	10.9	0.19	100.0
4. 시 홈페이지의 “여성광장”	58.7	23.0	11.0	0.39	100.0
5. 여성 1366	71.4	18.7	0.5	0.16	100.0

결과적으로 <표 10>과 같이 성인여성의 총 69.7%가 여성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여성의 관심과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과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여성정책과 사업내용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의 사업내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인지도와 인지경로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무응답	5	0.5	무응답	36	3.6
잘알고있다	4	0.4	시여성정책설명회	17	1.7
부분적알고있다	147	14.7	인쇄물우편물	73	7.3
보통이다	147	14.7	시인터넷홈페이지	36	3.6
잘알지못한다	439	43.9	신문 TV 등	314	31.4
전혀알지못한다	258	25.8	시출간동향지	17	1.7
합계	1000	100.0	모른다	499	49.9
			기타	8	0.8
			합계	1000	100.0

2)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도

개별 여성은 여성정책에 대해 특정한 주관과 요구를 가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낸 항목은 ‘저소득 여성,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에 달하였고,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이 19.2%를 차지하였다. 이 두 항목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현재 요구도가 두 방향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1> 여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여성참여확대여건조성	남녀평등성실행과차별의개선사업	저소득/미혼모/폭력피해여성의지원	여성단체및여성지원활동	여성정보화사업	여성의능력개발을위한교육및지원	기타	무응답	전체	χ^2 (***p<.001)
연령	20대	14.0	19.8	33.5	7.0	7.9	15.7	0.4	1.7	100.0	30.34***
	30대	16.3	11.7	34.3	8.8	6.4	20.5	0	2.1	100.0	
	40대	14.0	14.0	30.8	11.2	4.8	22.0	0.8	2.4	100.0	
	50대	16.1	16.1	31.2	7.7	7.3	20.6	0.6	0.6	100.0	
	60대이상	5.6	16.7	44.4	14.8	3.7	9.3	1.9	3.7	100.0	
학력	무응답	0	11.8	41.2	17.6	5.9	0	23.5	0	100.0	22.19***
	무학	0	0	25.0	62.5	0	0	0	12.5	100.0	
	초등학교졸	3.9	9.8	5.9	33.3	11.8	5.9	29.4	0	100.0	
	중학교졸	2.8	16.9	15.5	31.0	8.5	5.6	17.6	2.1	100.0	
	고등학교졸	1.9	13.0	16.0	33.3	10.4	6.5	18.8	0.2	100.0	
	초대졸 이상	1.4	15.9	13.1	34.9	8.0	6.6	20.1	0	100.0	
	대학원 이상	6.6	18.0	16.2	27.9	6.6	9.8	14.8	0	100.0	
월가 구 소 득	100미만	5.4	10.8	45.9	5.4	5.4	24.3	2.7	0	100.0	21.45***
	200미만	15.3	15.8	31.6	8.8	6.0	18.1	0.9	3.3	100.0	
	300미만	15.8	14.0	34.8	9.3	4.7	19.6	0	1.9	100.0	
	400미만	14.7	12.4	31.3	10.1	8.3	20.7	0	2.3	100.0	
	400이상	12.7	17.9	34.3	9.7	7.5	15.7	0.7	1.5	100.0	

구체적으로 <표 11>에서 연령별로는 ‘저소득 여성,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질수록 ‘저소득 여성, 미혼모, 폭력피해

구 분		일자리 부족 과 취업하기 어려움	사회교육 의 다양 성 부족	참여가능한 단체나 사 회활동부족	여 성 복 지 시 설 의 부족	여성을 위 한 안전한 환경제공	무응 답	기타	전 체	χ^2 (**p<.01)
연령	20대	37.2	21.1	17.4	13.6	8.7	0.8	1.2	100.0	16.02**
	30대	37.5	21.6	17.3	14.1	7.8	1.4	0.4	100.0	
	40대	40.4	16.0	18.4	13.6	9.6	2.0	0	100.0	
	50대	47.7	14.2	13.5	14.8	7.1	2.6	0	100.0	
	60대이상	37.0	18.5	9.3	24.1	5.6	3.7	1.9	100.0	
학 력	무응답	41.2	17.6	23.5	17.6	0	0	0	100.0	19.67**
	무학(미취학)	37.5	12.5	25.0	25.0	0	0	0	100.0	
	초등학교 졸	39.2	17.6	13.7	21.6	3.9	3.9	0	100.0	
	중학교 졸	45.1	10.6	15.5	13.4	12.0	2.8	0.7	100.0	
	고등학교 졸	42.6	20.8	17.6	10.2	7.4	1.2	0.2	100.0	
	초대졸 이상	34.9	18.3	16.3	19.4	8.3	2.1	0.7	100.0	

구 분		일자리 부족 과 취업하기 어려움	사회교육 의 다양 성 부족	참여가능한 단체나 사 회활동부족	여 성 복 지 시 설 의 부족	여성을 위 한 안전한 환경제공	무응 답	기타	전체	χ^2 (**p<.01)
	대학원 이상	32.8	24.6	11.5	16.4	11.5	1.6	1.6	100.0	
월 가 구 소 득	100미만	37.8	13.5	18.9	18.9	8.1	2.7	0	100.0	13.98**
	200미만	43.7	16.3	13.0	13.0	11.6	0.9	1.4	100.0	
	300미만	40.1	17.7	17.7	14.3	7.1	2.8	0.3	100.0	
	400미만	37.3	18.9	18.4	16.6	6.9	1.8	0	100.0	
	400이상	41.8	19.4	17.2	12.7	8.2	0.7	0	100.0	

또한 여성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하기 어려움’(39.9%)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다양성 부족’(18.9%)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다음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사회활동 부족의 문제’(16.5%), ‘여성복지시설의 부족문제’(14.5%) 순이었다.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의 어려움’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자녀가 취업연령에 있는 50대가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다양성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20대가 21.1%, 30대가 2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젊은층의 여성들이 여성사회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시간대의 연장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력에 따라서도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의 어려움’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는데 중학교 졸업이하의 경우가 45.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에는 저학력일 경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사회활동 부족의 문제’(25.0%)와 ‘여성복지시설의 부족문제’(25.0%)를 지적하였고, 고졸이상의 경우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다양성 부족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역시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의 어려움’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37.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들의 일자리에 강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됨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과 취업연계 교육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4. 지역여성의 양성평등의식

지역 여성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6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는 김양희·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토대로 여성의 노동권, 여성의 정치활동,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 여성차별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점)’, ‘전혀 아니다(1점)’에 응답하였으므로 평균이 높을수록 문항내용에 대한 긍정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권에 있어 여전히 남편의 소득활동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더욱 높았다. 또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은 사회적 일이나 소득활동보다는 오히려 가정에 충실한 것을 더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활동영역, 여성차별제도 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여성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족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부문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가정에 대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표 13> 여성의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

구분		남편이 돈을 잘 벌면 부인은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치인이란 직업은 여성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여성은 가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시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호주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한다	χ^2 (**p<.05)
연령	20대	2.91	2.62	3.54	2.59	3.95	2.83	11.64**
	30대	3.18	2.79	3.61	2.67	3.87	3.05	
	40대	3.23	2.95	3.75	2.89	3.72	3.17	
	50대	3.42	3.03	3.67	3.05	3.60	3.27	
	60대이상	3.51	3.25	3.65	3.15	3.49	3.53	
학력	무응답	3.52	2.81	3.62	2.88	3.52	3.00	14.02**
	무학(미취학)	3.37	2.62	3.87	2.87	3.25	3.62	
	초등학교 졸	3.50	3.27	3.70	3.25	3.72	3.62	
	중학교 졸	3.44	2.07	3.72	2.97	3.69	3.34	
	고등학교 졸	3.16	2.85	3.66	2.79	3.81	3.08	
	(전문)대학 졸	3.08	3.74	3.62	2.68	3.82	2.95	
	대학원 재 이상	2.98	2.65	3.42	2.59	3.77	2.86	
월가 구 소 득	100만원미만	3.33	3.11	3.63	3.08	3.36	3.31	12.46**
	200만원미만	3.28	2.89	3.66	2.82	3.76	3.12	
	300만원미만	3.23	2.87	3.64	2.78	3.76	3.18	
	400만원미만	3.16	2.88	3.70	2.85	3.78	3.12	
	400만원이상	3.00	2.63	3.56	2.62	3.86	2.78	

V.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성정책은 여성의 성주류화 경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체계의 인프라 구축 및 현실적이고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실시, 취업알선을 위한 헤드헌팅제 도입을 제안한다. 특화된 직업교육과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각종 직업교육이나 훈련기관이 서로 비슷한 성격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주로 한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컴퓨터, 한복, 양재, 꽃꽂이, 홈패션 등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여성의 직업교육을 마치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하는 일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시된다. 이러한 교육은 결국 여성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실제 취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과는 상충됨으로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감마저 상실케 한다. 따라서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을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과 연계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전업주부가 일정기간 후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생활과 고용형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이 경우 여성들은 직업의식이 없거나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보육부문에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앞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경력 연장이 가능한 현실적인 능력개발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을 위한 헤드헌팅제는 '취업정보와 알선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요구된다. 이 때 행정기관은 취업알선 전담창구 기능을 담당하지만,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아웃소싱의 방법으로 취업전문 알선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관의 '힘'과 민의 '유연함'으로 여성취업 희망자들의 기대와 일자리를 연계시켜야 한다.

여성정책의 인지도 분석결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민·관협력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의식 제고', '여성정책 사업의 홍보강화를 통한 참여 유인', '관련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참여정부의 여성부는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고자 주요정책의 평가 및 분석의 준거로 'gender'를 고려하여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정책이 수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대하여 여성들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책집행자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교육훈련 강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 사업의 홍보강화를 통한 참여 유인의 경우 자치단체 여성사업 성과의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특히 사이버 공간의 접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은 여성정책이 다른 정책영역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에 근거한다. 즉 여성정책은 취업과 고용, 보육, 사회참여, 교육, 복지,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맞물려서 집행되어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어, 여성정책과와 연구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제안들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의지 있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여성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계획의 시의성을 높이고 지역여성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립할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종합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다. 향후 여성정책은 과거의 '피상적'이 아닌 '체감적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될 때 비로소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감이 형성되어 진정한 정책수혜자로서의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연구자체가 여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향후 여성에 관한 실증적 자료축적의 필요성, 여성에 관한 통계정보와 정책홍보의 강화, 여성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정책의 효과평가와 보완의 당위성, 중앙과 자치단체 상호간의 실무적 연계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부산 여성의 현실과 의식 및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문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을 수 있고 지역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여성의 실태와 의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현실에 대한 지속적 개발과 연구, 여성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 간의 지역통계는 자료자체도 미미한 데다가 여성관련 부분은 거의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지역통계 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최근 젠더예산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남녀구분 통계의 당위성이 지적될 수 있고, 관공서의 여성관련 홈페이지 신설개편으로 여성정보(공무원, 산업체, 취업관련현황)공유의 확대 움직임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별 여성들의 상황 차이(도시별 산업구조나 규모차이)를 고려한 고유한 여성상과 정책개발의 필요성, 광역자치단체의 각 여성관련부서에 여성정책협력관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올바른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이라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일컬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조명하면서 성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대안, 가치체계를 제반 제도 부문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에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여성정책의 과제 대비 자원은 절대 부족하므로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 자치단체별 여성중점사업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끝으로, 본 조사 및 분석결과는 특정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 여성의 요구수준이나 항목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기존 문헌분석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하여 최대한 객관성, 타당성을 높이려 하였으나, 일정한 애로점이 있었으며, 이것은 곧 본 연구의 한계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공계순·서인해(2001), 종합사회복지관 욕구조사보고서 실태분석 : 이론적 접근에서 살펴본 욕구조사방법과 조사내용유형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평등·참여·복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47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복규(1997), “대구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대구광역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정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김태홍(1999), 인천여성의 인력개발 및 활용 확대방안, 제2회 여성정책토론회, 인천광역시
- 박경란·전예화·제미경(1997), 김해시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여성단체 및 기관의 실태조사와 여성의 복지요구도 조사,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연구소
- 박충선(2001), 대구지역 여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술지 제 11권 1호
- 신경희(1998), 서울여성의제21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안진(2003),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일상 생활과 복지욕구 : 목포 상동지역 빈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제 12권
- 이숙진(2000), 인천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인천발전연구원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 조순경(1999),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조은(1996),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보화시대의 문화, 여성, 나남출판
- 캐롤린 모저 저; 장미경 외 공역(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광주광역시(2002), 광주광역시 실태조사서

- 경기도(2002),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 개발연구
 -----(2003),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광주광역시(2002), 광주여성실태조사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1999년도
 시행실적 및 2000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 여성정책 안내 - 여성정책 주류화에 대한 이
 해와 실천방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2003a), 보육설
 치·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과
 -----(2003b),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과
 부산광역시(1999),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2000~2004)
 -----(2003), 2003년도 여성정책 사업안내
 서울특별시(2000),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
 여성부(200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 참여정부 여성정책, 여성부 보도자료
 인천광역시(2002),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충남여성개발원(1999), 충남 여성의 의식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
 청회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1998),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행정자치부(2002), 여성과 공직
 Altschuld, J. W.(1994), *Resource materials for needs assessment*, The
 Ohio University
 Bittman, M. (1999), *Parenthood Without Penalty : Time Use and
 Public Policy in Austrian and Finland*, Feminist Economics,

- Vol, 5, No, 3, pp, 27-42
- Crompton, R.(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Vol, 8, No, 3, pp, 266-291
- Dermott, E.(2001), 'New Fatherhood in Practice? Parental Leave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1, No, 4(5,6), pp, 145-164
- Doorne-Huiskes, A.(1999), 'Work-Family Arrangements : the Role of the State versus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S, Backer and A, Doorne-Huiskes A,(eds), Women and Public Policy : The Shifting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ldershoe, Ashgate, pp,93-110
- Hamann, M. S.(1997), *The Effects of Instruments Design and Respondent Cracteristics on Percieved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lumbus.
- Kamerman, S. B. and Kahn, A. J.(ed)(1978). *Family Policy : Governmant and familes in fourteen countries*.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ser, C.(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Pascall, G.(1986), *Social Policy : A Feminist Analysis*, London,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Sung, S. R.(2002), *Gender Equality in Confucian Welfare Regime? Wome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in Korea*,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Nottingham
- Warren, T.(2000), 'Diverse Breadwinner Models : A Couple-Based Analysis of Gendered Working Time in Britain and Denmark',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0, No, 4, pp, 349-371
- Witkin, B. R & Altschuld J. W.(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 : A practical guide*,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

A Empirical Study on the Women's Perception for Women Policy in Local Government

Yangho Woo*

Meeyoung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activity, economic activity, women policy, gender equality awareness(to examine Strategic Gender Needs). The su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000 adult women who live alone or with spouse in Busa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interview.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 and χ^2 .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social activity : I argued that gender equality cannot be achieved without women's efforts, though the new environm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in enhancing gender equality and increasing women's social participation. (2)economic activity : the chanc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has not increased and sexual division by industry and occupation has been continued, and as a result it has been negative influence on women. (3)women policy : despite of high awarness of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matter of women and welfare, the degree of awarness of terms, and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toward women's welfare was somewhat low. The majority become aware of the necessity of women policy and women-related information chiefly by mean of mass media, so the reinforcement of media-education toward these areas is required. (4)gender equality awareness : gender equality in women policies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gender-perspective policy making. An women policy in the planning stage

* Busan National University

** Busan Development Institute

should be explored in depth with reference to its influences to both male and female.

Key—Words : Women Policy, Need Assesment, Gender Needs,
Gender Equality

